

김종인 “개혁공동정부, 2018년 개헌”

“2020년 7공화국 출범... 통합정부 의사 있으면 자유한국당도 당대 당 방식 공동정부 참여 가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30일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의 참여 여부와 관련,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며 “그런 분들을 통합정부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의원만 참여시키는 건 남의 의원을 빼먹어 써먹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정부가 아니다”라며 “공동정부는 정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회에서 협치도 되고 조화도 되는 것”이라고 발언. 각 당 소속 의원들의 단순한 내각 참여가 아닌 당대 당 방식의 공동정부 구성을 시사했다.

그는 범여권과의 ‘선저 전 연대’에 대해서는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것”이라며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단일화는 각 후보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범여권과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희박

해진 데 대해서는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어떤 가능성이 될 것인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의 물밑 접촉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통합정부준비위에 영입해서 일할 것이냐는 특정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자신과 비문연대 제3세대 구축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점쳐졌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준비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그 분들과 공동정부준비위에 대해 사전 연락하거나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 내에서 3년 임기단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그에 따르겠다고 한 건 안 후보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아울러 자신에 대한 안 후보의 차기 내각 구성 ‘전권’ 위임 여부에 대해 “구성에 관한 인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내가 추려서 가장 상징성에 맞는 사람을 골라 놓으면 최종적 판단은 당선자가 하는 것”이라며 “전권을 갖는다고 해서 임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 지지를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선거가 9월 남아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가 100% 적중하리라고 안 본다”며 “집권한다는 희망을 갖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文 “자치경찰제 확대-의무경찰 폐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의무경찰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안혁신안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이제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로,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범죄율은 8% 증가했다”며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치안에 불안한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뜩이나 경찰 인력이 부족하는데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중심의 국가경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동네’ ▲‘안심 귀가길’ 서비스 제공 ▲과학치안을 위한 예산 투자 등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지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선후보자 부인들 전북 방문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씨(사진 왼쪽)와 홍준표 후보의 부인인 이순삼씨,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씨(사진 오른쪽)가 지난 28~29일 전북을 방문해 비싼 일정을 보냈다.

국민의당 도 선대위, 국민통합개혁공동정부 만들 것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이 앞장서서 전북중심 정권교체로 ‘국민통합 개혁공동정부’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김관영 의원 등을 비롯한 의외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개혁공동정부의 핵심은 ‘개혁, 통합, 미래’라며 “이는 특정 계파가 좌지우지하는 패권정치의 영원한 종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선대위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전북이 변방정권으로 남아 관리대사지역으로 남느냐 아니면 전국의 중심지가 되느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이 변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이어서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다른 선거캠프와는 다르게 모든 공약을 안철수 후보와 직접 상의하고 토론해서 만들었다”며 “이 공약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18개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안재용 기자

2위 안철수 - 3위 홍준표, 지지율 오차범위 접전

文 42.6% 安 20.9% 洪 16.7%... 홍 후보, 60세 이상과 대구·경북·충청권 안 후보 제쳐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3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격차를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7~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23명에게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2.6%의 지지율을 1위를 유지했다.

문 후보는 직전 조사(24~26일)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2위와의 격차를 두 배

이상으로 벌렸다.

안 후보는 20.9%로 직전 조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8.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10일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상승세를 탄 홍 후보는 3.7%포인트 오른 16.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직전 조사에서 9.8%포인트였던 안 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4.2%포인트로 좁혀졌다.

홍 후보는 60세 이상(36.0%)에서 안 후보(29.8%)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섰고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도 안 후보를 제

치고 2위로 상승했다.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층(46.8%)에서의 지지율도 안 후보(19.0%)와의 격차를 27.8%포인트로 벌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포인트 오른 7.6%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층(50.4%)에서 문 후보(27.9%)에 앞선 1위를 유지했다. 20대(14.9%)에서도 안 후보(12.0%)에 앞선 2위를 이어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2%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가 0.1%포인트 오른 1.2%였으며 기타 후보 0.6%, 부동층(지지후보 없음·잘모

름) 5.2%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당 18.6%, 자유한국당 15.0%, 정의당 8.9%, 바른정당 4.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포인트 떨어지며 30%대로 내려앉았지만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2%포인트, 2.7%포인트 올랐다. 정의당 역시 1.5%포인트 오르며 9%선에 근접했다. 바른정당은 1.5%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4%대로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임의결기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1만337명 중 1523명이 응답을 완료해 11.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이호근, 우선지급금 환수 전북도 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전북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우선지급금 규모는 농가당 평균 약 6만원, 총 197억2,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전북의 경우 전국 총 환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9억3,800만원 정도이다.

이호근 의원은 “무능한 정부가 못한다면 삼락농정을 표방하는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